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공론화 거쳐 10월 중 정부안 확정”

김성환 기후부 장관, 기자단 차담회
2040년까지 대체 전원 확보 ‘변수’
신규 원전, 에너지 믹스 최대 쟁점

기후재난 대응 체계 현대화 ‘시급’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기본안 공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청사진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 추진 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9월까지 한 달간 분야별 토론회와 공론화를 거쳐 10월 전기국회 중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후대응위원회 보고 및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중단과 전력 수요 증가…‘에너지 믹스’ 최대 쟁점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 변수는 2040

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 전원 확보다. 김 장관은 “2040년은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을 공언한 연도와 맞물린다”며 “현재 가동 중인 60개 발전기 중 2040년 이후에도 법적 설계수명(30년)이 남아있는 20개 발전기의 처리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줄일 경우 이를 대체할 발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봄·가을철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충돌할 때 배터리(ESS)나 양수발전 등 저장장치를 어느 규모로 가져갈지가 관건”이라며 “가스발전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여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행 경로를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12차 전기본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개 정도를 추가로 할거냐, 이게 에너지 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 개인의 의사로 정책을 정

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년 빈도 호우 상례화…기후재난 대응·용수 공급 체계 전면 재정비

최근 호남·경상권 등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기후재난 대응 체계의 현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과거 30년, 50년 빈도로 내리던 강우 대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와 가뭄이 상례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예보 및 대응 인프라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 레이더 및 위성장비의 분석 픽셀을 정밀화해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하수관로 배수 용량을 우선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내 기후위기 대응 조직 체계 강화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첨단 산업단지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등의 용수 공급을 위해 동북댐 증고, 하수 재활용, 농업 용수 전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며 “사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생태적 피해 최소화 원칙을 눈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송전망 갈등은 지중화·보상 확대로 풀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하고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일반 주민의 요금이 차등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정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기본안을 보고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 및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과 친환경 공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복층화해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마을 인근 구간은 최대한 지중화하겠다”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민주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동기금법인, 탈퇴 사업주 3주 내 행정청 보고 의무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사후 관리 제도가 신설된다. 탈퇴 사실을 즉시 파악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 설치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혜택의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8월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

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사업주의 탈퇴 사실이나 이후 법 집행 여부를 행정청이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 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현장 디지털 전환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 적용

축산물 출하 및 유통 현장에서 종이 서류와 수기 작업이 사라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월부터 강원도 내 도축장 중 최초로 황성케이씨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출하시스템은 농가와 운송업자, 도축장 간 거래 출하·입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기존의 종이 서류 작성과 수기 입력 방식을 대체해 축산물 이력 정보와 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황성케이씨 도축장 전경. /축산물품질평가원

특히 이번 황성케이씨 도입은 황성군, 황성축협, 황성케이씨가 보유했던 기존 행정·생산 시스템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황성케이씨를 포함해 전국 19개 도축장에 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ERP)과 전자출하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변호사가 돕는다

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청구 준비 단계부터 폭넓은 상담 지원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어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청구 준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구제받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정작 국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은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더욱 폭넓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됐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내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중앙행정심위의 상담 필요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게 된다.

특히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사전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연속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왼쪽부터)KT AX사업부문장 박상원 전무,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대표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훈상 부사장이 AX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농협경제지주 ‘NH싱글물’ 유통분야 AI 기반 인프라 확대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맞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전환

농협경제지주가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인 ‘NH싱글물(농협몰)’의 디지털 유통 혁신에 나선다. 명절이나 대규모 행사 기간 급증하는 접속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인프라를 확대해 산지 농가의 판로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 유통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NH싱글물은 기존 시스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명절 성수기나 대형 할인 행사 등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지연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갖추게 됐다.

농협은 이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NH싱글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AI 중심의 농산물 유통 혁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사는 e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AX 과제 공동 발굴 ▲AI 기반 고객 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고도화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 “AI로 행정용어 쉽게 확인”

‘HRDKorea MCP’ 서비스 가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답변해 주는 ‘HRDKorea MCP’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통신 규격이다. 공단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API 229개 중 핵심 60여 개를 선별해 MCP로 개발·배포했다.

서비스 대상은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지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자격, 숙련기술진흥, 외국

인고용지원 등 6개 사업 분야(41개 가능)다.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키 발급 없이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 공단 MCP 서버 주소만 등록하면 24시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 일정·합격률 조회, 해외 채용공고 검색, NCS 기반 직무·자격 추천 등을 일상에 질문 한 번으로 1분 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답변 조화가 가능하며, 공단 실시간 DB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라 AI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